

# 개헌·추경 정국 '키맨' 급부상

평화당·정의당 교섭단체 합의

8대 정책과제 공조키로  
원내 20석 유지 책임 명시  
상임위원장·선거 연대 미정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29일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구성에 대한 합의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교섭단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또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당은 각자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되,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8대 정책공조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 및 농축수산업 미래 생명 환경 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 등이다.

교섭단체 운영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규정했고, 탈퇴하려는 당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와 관련,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이고, 평화당 한병기 함께 헌정특위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20석 유지를 위해 평화당에 지방선거 불출마 확답을 요구



"이제는 동지" 민주평화당 이용주(왼쪽)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 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공동교섭단체 합의안을 발표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는 것과 관련해서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 정치인을 거명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합의문에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한다'고 넣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시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양당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교섭단체 구성 과정에서 선거연대를 논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당이 어렵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기로 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조율할 것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단 개헌 문제와 관련해 양당은 권력 분산을 위한 절충안인 '총리 국회 추천제'와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앞세워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 처리에 있어서는 양당의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강기정 "공동지방정부 구성하자"

정책 연대 시장 후보단일화 제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과 관련, 강기정 예비후보가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물리적인 '반이용섭 연대'가 아니라 '광주정신에 부합한 인물들이 모여 정책과 대안을 먼저 논의 한 뒤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다.

강 예비후보는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단순한 3자 연대가 아닌 공동지방정부 구성까지 고민 중"이라며 "합종연횡으로 한 사람을 후보로 정하는 것은 시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새로운 방식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3자 연대는 '후보 3명을 1명으로 한다'는 단일화에 멈추지 않고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연대에 참여하는 후보 모두와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려고 한다"면서 "공동지방정부 구성은 아직 숙성되지 않은 단계라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누구를 후보로 세우느냐보다 어떤 색깔의 지방정부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민형배, 최영호 두 예비후보의 단일화 공식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구상을 다듬기 위해서는 4월 2일 전 단일화하기가 어렵다"며 "누구를 특정해 단일화에서 배제하거나 반대로 누구를 특정해 단일화하지도 않겠으며 시간을 두고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9일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의 캠프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연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5년 넘게 진실 공방을 벌인 이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들에 대한 감금은 없었다는 결론을 낳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역할 등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윤장현 "민주당 경선 나서겠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재선 도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며 '진짜 일자리' 완성을 위해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문을 통해 그는 "지난 4년은 삼김·자율의 행정으로 따뜻한 공동체 광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행하는 시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낙후하고 당당한 광주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소통하는 정치, 포용하는 복지, 융합하는 경제, 창의적인 문화, 연결되는 도시를 5대 시정목표로 삼아 더 앞선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섭, 빛고을노인건강센터 배식봉사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9일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노인건강센터에서 배식봉사를 했다.

이 후보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노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노인건강타운 추가 건설 ▲퇴직자 재취업알선 시스템 및 노인공동 작업장 마련 ▲평생교육 및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검토해 '노후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갈 것임을 약속했다. 또 "이제는 노인복지 분야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자치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국회 정관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지지 및 자치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민형배 후보는 "자치분권 개헌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상생과 협력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자치분권 개헌은 세상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물론,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국가전략"이라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자치분권 개헌이 시행되도록 함 필요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속의하여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호 "무동산 경관관리 새 기준 만들어야"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9일 "광주의 새로운 도시경쟁력 요소는 도시경관이다. 시민들이 무동산이나 광주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높이관리, 경관관리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예전에는 산수오거리에서 소태동으로 가는 길 곳곳에서 무동산이 보였으나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무분별한 초고층 아파트 허가와 신축에서 비롯된 일로 시민생활의 관점에서 허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가 공익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도시공원 조성과 녹지공간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내일 순천 충효로 선거사무소 개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31일 순천시 충효로에 선거사무소 문을 열고 본격적인 경선전에 돌입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등 내·외빈 축사와 응원메시지 발표에 이어 '전남도민의 민심의 바다를 누비라'는 뜻에서 신 예비후보에게 운동화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 예비후보는 도시사 출마 배경과 함께 향후 도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핫라인, 남도를 살려라'를 슬로건으로 전남 곳곳을 찾다니며 '문재인 대통령과 전남도민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강조해 왔다.

김영록, 전남 동부권 정책·공약 발표회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29일 "전남지역 산업의 중심지이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전남 동부지역을 웰빙과 힐링의 관광도시, 동북아 물류 허브 중심지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순천대에서 '전남 동부권 정책·공약 발표회'를 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한 3000만 관광객 시대 개막, 해운산업·항만클러스터를 통한 광양항 경쟁력 강화, 첨단 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기능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진강 환경유역정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장만채 "광주공항 이전 논의 빨리 매듭"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은 29일 "광주공항 이전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장 전 교육감은 "공항 이전의 핵심은 군 공항만의 이전이나, 민간공항까지 모두 이전이냐"라며 "광주시와 논의를 통해 이를 매듭짓고, 후보지를 공모해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공항만 이전할 경우 전남도민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으나, 민간공항까지 함께 이전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유지할 시·군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감 후보

오인성 "방과후프로그램 지자체 이관 검토"



오인성(62·전 나주교육장)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돌봄사업 등 방과후프로그램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강진군 덕수학교를 찾아 교직원·학부모·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돌봄 등 방과후학교의 강제가 수요자의 요구와 동떨어지고 행정업무 부담이 커서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돌봄사업 등 방과후프로그램의 경우 가정·학교·사회·유관기관이 협의를 거쳐 인프라 구축과 인력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한 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오광록·김형호 기자 jwpark@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